

2020년 국가직 사회 문제 및 해설(가책형) (2020.07.11.)

정치와 법 1~10번(10문제)
사회문화 11~15번(5문제)
경제 16~20번(5문제)

1.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치 과정은 사회의 다양한 요구가 표출되는 (가), 정책 결정 기구가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나), 산출된 정책에 대한 사회의 평가가 재투입되는 환류 과정을 의미한다.

- ① 정부가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하는 것은 (가)에 해당한다.
- ② 정당이 공직 선거에 후보자를 공천하는 것은 (나)에 해당한다.
- ③ (가)가 (나)에 잘 반영될수록 시민들의 정치적 효능감이 높아진다.
- ④ 향리형 정치문화가 지배적인 사회에서는 (나)보다 (가)가 활성화 된다.

[정답] ③

[출제단원] 정치와 법 - III. 정치 과정과 참여

[출제영역] 이스턴의 투입-산출 모형, 정치 문화

출제 가능 지수					
난이도 지수					

(가)는 정책 결정 기구를 상대로 사회적 쟁점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요구하는 과정인 '투입'입니다. (나)는 정부의 정책 생산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산출'입니다.

- ① (X) 정부가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하는 것은 공식적 정책 결정 참여자인 행정부의 결정과 행동이므로 산출(나)에 해당합니다.
- ② (X) 정당은 이익 집단이나 시민단체, 언론, 학자 등과 같은 비 공식적 정책 결정 참여자일 뿐이며, 행정부·입법부·사법부와 같은 공식적 정책 결정 참여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정당이 공직 선거에 후보자를 공천하는 것은 산출(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③ (O) 정치적 효능감이란 개인의 정치적 행동이 정치과정에 영향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다는 신념을 말합니다. 투입(가)에서 정책 결정 기구를 상대로 요구한 정책이 산출(나)에 잘 반영되어 정책으로 생산될 경우 시민들의 정치적 효능감이 높아집니다.
- ④ (X) 향리형 정치 문화의 경우 자신이 속한 지역을 벗어난 상위의 정치 체계에 대한 인식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정치 과정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투입(가)과 산출(나) 어디에도 반응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향리형 정치 문화는 전근대적인 전통 사회에서 주로 나타나는 정치 문화입니다.

2. 헌법상의 국가 기관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 :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는 행정부 내 최고 심의 기관의 의장
B :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 등을 담당하는 기관

- ① A는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 ② A는 국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되며, 임기는 5년이다.
- ③ B는 권한 쟁의 심판을 담당한다.
- ④ B는 사법부 소속의 독립성을 갖는 헌법 기관이다.

[정답] ②

[출제단원] 정치와 법 - II. 민주 국가와 정부

[출제영역] 대통령, 감사원

출제 가능 지수					
난이도 지수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는 행정부 내 최고 심의 기관은 국무 회의이고, 국무 회의의 의장은 '대통령(A)'입니다. 그리고 예산 결산의 확인, 국가 및 공공 단체의 회계 검사권, 공무원 직무 감찰권을 행사하는 기관은 '감사원(B)'입니다.

- ① (X) 대통령(A)은 선거에 의하여 선출됩니다.
- ② (O) 대통령(A)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됩니다(헌법 제67조 제1항).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습니다(헌법 제70조).
- ③ (X) 권한 쟁의 심판이란 국가 기관 상호 간, 국가 기관과 지방자치 단체 간 및 지방 자치 단체 상호 간에 권한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로써 '헌법 재판소'가 담당합니다.
- ④ (X) 감사원(B)은 조직상으로 대통령 소속 기관입니다. 다만, 직무와 기능 면에서는 독립하여 활동하는 헌법 기관입니다.

3.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지방 자치 참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 의회의원(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제외함)을 소환할 수 있다.
- ② 19세 이상의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 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면 「지방자치법」이 정 하는 바에 따라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 ③ 국민인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 ④ 주민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 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사항에 대해 재의를 요구 할 수 있다.

[정답] ④
[출제단원] 정치와 법 - II. 민주 국가와 정부
[출제영역] 우리나라의 주민 참여 제도

출제 가능 지수					
난이도 지수					

- ① (O) 주민 소환 제도에 대한 옳은 설명입니다. 주민 소환 제도는 선거에 의해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을 임기 중에 주민의 투표로 해임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비례대표 지 방의회의원은 주민 소환의 대상이 아닙니다.
- ② (O) 주민 감사 청구에 대한 옳은 설명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 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일정한 절차를 거쳐 감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법 제16 조 제1항).
- ③ (O) 주민의 권리에 대한 옳은 설명입니다. 국민인 주민은 법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지방의회의 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참여할 권리를 갖습니다(지방자 치법 제13조 제2항).
- ④ (X)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될 경우 그 의결사항에 대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주민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입니다. 즉, 지방자치 단체장은 지방의회 의결에 대한 재의 요구권을 행사함으로써 지방 의회를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습니다.

4. 국회의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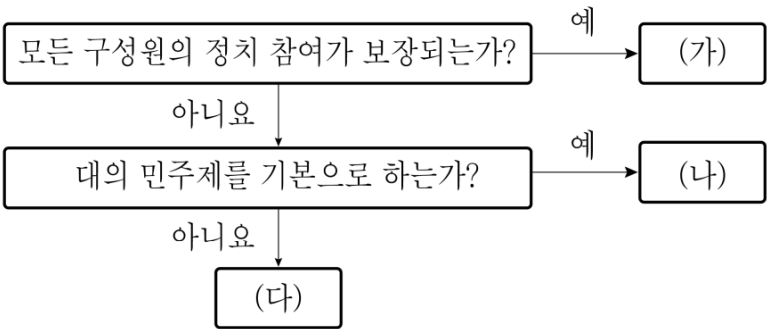
- ①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3분 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국회는 국가 기관 구성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장 임명권 및 중 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선출권을 가진다.
- ③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 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있다.
- ④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정답] ④
[출제단원] 정치와 법 - II. 민주 국가와 정부
[출제영역] 국회의 권한

출제 가능 지수					
난이도 지수					

- ① (X)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헌법 제 49조). 이를 일반 의결 정족수라고 합니다.
- ② (X)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헌법재판관 중에서 대 통령이 임명합니다. 국회가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하는 것은 아닙니 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합니다. 이때 호선이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이 서로 투표하여 위원 가운데에서 위원장을 뽑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국회가 중앙선거 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 ③ (X)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헌법 제57조).
- ④ (O)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에 대한 옳은 설명입니다. 국정감사는 국정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국정조사는 특정한 사안을 대 상으로 합니다.

5. 그림의 (가) ~ (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 ~ (다)는 고대 아테네 민주정치, 근대 민주정치, 현대 민주정치 중 하나이다)



- ① (가)는 시민이 직접 국가를 운영하는 정치형태이다.
- ② (나)의 사상적 배경은 계몽사상과 사회계약설이다.
- ③ (가), (나)의 공통점은 보통 선거 제도를 확립한 것이다.
- ④ (가), (다)의 공통점은 여성의 정치 참여가 제도화된 것이다.

[정답] ②
 [출제단원] 정치와 법 - 1. 민주 정치와 헌법
 [출제영역]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

출제 가능 지수					
난이도 지수					

모든 구성원의 정치 참여가 보장되는 (가)는 현대 민주정치입니다. 모든 구성원의 정치 참여가 보장되는 것은 아닌 (나)와 (다) 중 대의 민주제를 기본으로 하는 (나)는 근대 민주정치, 직접 민주제를 기본으로 하는 (다)는 고대 아테네 민주정치입니다.

① (X) 시민이 직접 국가를 운영하는 정치형태는 직접 민주 정치를 특징으로 하는 고대 아테네 민주정치(다)에 대한 설명입니다.

② (O) 근대 민주 정치는 시민 혁명을 통해 절대 왕정을 타파하면서 성립하게 됩니다. 이러한 시민 혁명은 천부 인권 사상, 계몽사상, 사회계약설을 사상적 배경으로 합니다. 계몽사상이란 인간이 이성의 힘으로 편견과 오류를 극복하고 모순과 부조리를 바로잡을 수 있다고 보는 사상이고, 사회계약설이란 사람들이 천부 인권을 보장받기 위해 스스로 계약을 통해 국가를 구성했다는 이론입니다.

③ (X) 19세기 차티스트 운동을 통한 보통 선거의 도입 요구는 20세기 초가 되어서야 보통 선거의 도입이라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즉, 보통 선거 제도의 확립은 현대 민주정치(가)의 특징일 뿐이며, 근대 민주정치(나)의 특징은 아닙니다.

④ (X) 보통 선거의 도입에서 알 수 있듯이 현대 민주정치(가)에서는 여성의 정치 참여가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반면, 고대 아테네 민주정치(다)에서는 시민권을 가진 모든 시민인 성인 남성들만이 공동체의 의사 결정에 참여했을 뿐이며, 여성의 정치 참여는 배제되었습니다.

6. 국제법의 법원(法源) (가) ~ (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 ~ (다)는 조약, 국제 관습법, 법의 일반 원칙 중 하나이다)

(가) 국내 문제 불간섭 원칙
(나) 신의 성실의 원칙,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
(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 교토 의정서

- ① (가)는 국제 행위 주체 간의 합의가 명시적 문서로 작성된 것이다.
- ② (나)는 문명국들이 공통적으로 승인하여 따르는 법의 보편적인 원칙이다.
- ③ (다)는 국제 사회의 관행이 국제 사회에서 법으로 승인된 것이다.
- ④ 우리나라에서 (가), (나)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정답] ②
 [출제단원] 정치와 법 - VI. 국제 관계와 한반도
 [출제영역] 국제법의 법원(法源)

출제 가능 지수					
난이도 지수					

(가)는 국제 관습법, (나)는 법의 일반 원칙, (다)는 조약입니다.

① (X) 국제 행위 주체 간의 합의가 명시적 문서로 작성된 것은 ‘조약(다)’입니다. ‘국제 관습법(가)’은 국제 사회의 반복된 관행이 국제 사회에서 법적 확신을 얻어 법 규범으로 승인됨으로써 효력을 가지게 된 국제 법규입니다. 국제 관습법은 조약과 달리 문서 형식의 합의문이 없습니다.

② (O) ‘법의 일반 원칙(나)’에 대한 옳은 설명입니다. 법의 일반 원칙은 원래 문명국의 국내법 체계에 적용되는 공통적인 법 원칙이지만, 국제 분쟁을 해결할 때 관련 법규가 없거나 법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재판할 수 없는 경우를 막고자 국제 사법 재판소에서 재판의 준거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③ (X) 국제 사회의 관행이 국제 사회에서 법으로 승인된 것은 ‘국제 관습법(가)’입니다.

④ (X) 헌법 제6조 제1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약(다)’의 경우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되어야 합니다. 반면,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를 의미하는 ‘국제 관습법(가)’은 별도의 법적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또한 ‘법의 일반 원칙(나)’은 원래 문명국의 국내법 체계에 적용되는 공통적인 법 원칙이기 때문에 별도의 법적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7.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법원은 □□법 일부 조항이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크다며 A에 (㉠)을 제청하였다.
- △△법 위반으로 기소된 갑은 1심 재판 중 해당 법 조항에 대해 법원에 (㉡)을 신청한 후, 기각되자 A에 (㉢)을 청구하였다.

- ① A의 중국심리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가 찬성하면 해당 법률조항은 위헌으로 결정된다.
- ② 법원이 ㉠을 제청하기 위해서는 소송 당사자의 제청 신청이 있어야 한다.
- ③ 갑이 법원에 신청한 ㉡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다.
- ④ ㉠은 위헌법률심판이고, ㉢은 권한쟁의심판이다.

[정답] ③

[출제단원] 정치와 법 - II. 민주 국가와 정부

[출제영역] 헌법 재판소의 권한

출제 가능 지수					
난이도 지수					

■ 법원은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이 위헌이라는 의심이 드는 경우에 직권으로 또는 재판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헌법재판소(A)」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수 있습니다.

■ 재판 중인 당사자는 자신에게 적용되는 법률이 위헌이라고 판단될 경우 해당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재판 당사자는 직접 「헌법재판소(A)」에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는 「헌법재판소」, ㉠은 「위헌법률심판」, ㉡은 「위헌법률심판 제청」, ㉢은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입니다.

- ① (X) 위헌법률심판과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에서 위헌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 ② (X) 법원은 직권 또는 재판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수 있습니다. 즉, 소송 당사자의 제청 신청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수도 있습니다.
- ③ (O)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입니다.
- ④ (X) ㉠은 '위헌법률심판'이고, ㉢은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입니다.

8. 밑줄 친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과 을은 법률상의 부부이다. 혼인 생활을 유지하던 중 갑은 을의 심각한 부정행위를 알게 되어 을에게 ㉠ 협의상 이혼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을은 이를 거절하였고, 이에 갑은 가정법원에 ㉡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였다.

- ① ㉠의 효력은 법원에서 이혼 의사 확인을 받은 즉시 발생한다.
- ② ㉠과 달리 ㉡에서만 을은 갑에게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 ㉡ 모두 법원을 거쳐야만 혼인 관계를 해소할 수 있다.
- ④ ㉡은 법률로 정한 이혼의 사유나 원인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정답] ③

[출제단원] 정치와 법 - IV. 개인 생활과 법

[출제영역] 이혼

출제 가능 지수					
난이도 지수					

① (X) 협의상 이혼(㉠)은 부부가 이혼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혼인 관계를 끝내는 것입니다. 협의상 이혼은 가정 법원으로부터 이혼 의사 확인을 받은 후 이혼 신고를 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혼 의사 확인을 받았더라도 이혼 신고를 하지 않으면 협의상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② (X)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혼인 생활 중에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재산 분할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재산 분할 청구권은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 어느 경우에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혼인 관계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유책 배우자)인 '을'도 상대방 배우자인 '갑'에게 재산 분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유책 배우자의 경우 상대방 배우자에게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과 구별됩니다.

③ (O) 협의상 이혼(㉠)은 가정 법원으로부터 이혼 의사 확인을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재판상 이혼(㉡)은 이혼 소송을 통해 가정 법원으로부터 이혼 판결을 받아야만 합니다. 따라서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 모두 그 내용은 다르지만 법원을 거쳐야만 혼인 관계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④ (X) 재판상 이혼(㉡)은 이혼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못할 때 당사자 일방의 청구에 의한 가정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이혼하는 것입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재판상 이혼 사유가 인정되어야만 합니다.

9. 밑줄 친 ㉠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은 을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체포되었다. 경찰은 갑을 ㉠ 구속 수사한 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고, 갑은 기소되었다. 그 이후 갑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 석방되었고, 국민 참여 재판이 열렸다. ㉢ 1심 법원은 갑에게 ㉣ 징역 1년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 ① 검사가 영장실질심사를 한 후 ㉠ 여부를 결정한다.
- ② ㉡을 위해 갑은 구속적부심사를 법원에 청구하였다.
- ③ ㉢은 지방 법원 본원 합의부이다.
- ④ ㉣은 선고 후 2년이 지나면 형의 선고가 없었던 것으로 된다.

[정답] ③

[출제단원] 정치와 법 - V. 사회생활과 법

[출제영역] 형사 절차의 의미와 과정, 국민 참여 재판

출제 가능 지수					
난이도 지수					

- ① (X) 수사 절차에서 피의자를 구속하여 수사하기 위해서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구속 영장이 있어야 합니다. 구속 영장의 청구를 받은 법관은 구속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여 구속 사유를 판단합니다. 이를 영장 실질 심사라고 합니다. 따라서 영장실질심사를 한 후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검사가 아니라 ‘법관’입니다.
- ② (X) 구속적부심사란 수사 기관에 의하여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법원이 구속의 적법 여부와 그 필요성을 심사하여 구속이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경우에 ‘피의자’를 석방시키는 제도입니다. 이는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피의자’를 석방시키는 제도라는 점에서 법원이 구속된 ‘피고인’의 석방 여부를 결정하는 보석 제도와 구별됩니다. 그런데 제시된 사례에서 갑은 검사에 의해 기소(=공소 제기)된 이후에 법원의 허가를 얻어 석방(㉡)되었습니다. 즉, 갑은 ‘피고인’이므로 갑이 석방되기 위해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것은 아닙니다. 갑은 법원에 보석을 청구하여 석방된 것입니다.
- ③ (O) 제시된 사례에서 1심 법원(㉢)은 국민 참여 재판으로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국민 참여 재판은 형사 재판만을 대상으로 하고, 1심만 대상으로 하며, 합의부 관할 사건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국민 참여 재판을 진행 한 1심 법원(㉢)은 지방 법원 본원 합의부를 알 수 있습니다.
- ④ (X) 집행유예 판결(㉣)은 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만 유예하는 유죄 판결입니다. 형법은 집행유예의 효과와 관련하여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65조). 즉, 집행유예 판결에서 정한 유예기간이 경과하면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효과가 있는 것이며, 형의 선고가 없었던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형 선고의 법률적 효과가 없어지는 것일 뿐이며, 형 선고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경우 집행유예 판결에서 정한 기간인 2년을 경과하면 형의 선고가 없었던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을 뿐입니다.

10.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갑은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을은 잦은 결근을 하였다는 이유로 모두 A 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하였다. 갑과 을은 각각 B 지방 노동 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B 지방 노동 위원회는 갑의 구제신청은 받아들이고 을의 구제신청은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보 기>

ㄱ. 갑, 을 모두 지방 법원에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ㄴ. 을은 B 지방 노동 위원회의 기각 결정 처분을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A 회사 사용자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ㄷ. B 지방 노동 위원회는 갑의 해고에 대해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판정한 때에는 A 회사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ㄹ. A 회사의 노동조합은 갑과 을의 해고에 대해 B 지방 노동 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정답] ①

[출제단원] 정치와 법 - V. 사회생활과 법

[출제영역] 부당 해고와 부당 노동 행위의 구제

출제 가능 지수					
난이도 지수					

- 갑은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하였습니다. 따라서 A 회사의 갑에 대한 해고는 부당 해고일 뿐만 아니라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합니다. 반면, 을은 잦은 결근을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하였습니다. 이 경우 A 회사의 을에 대한 해고가 부당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는 있겠지만, 을에 대한 해고가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 ㄱ. (O) A 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한 갑과 을 모두 노동 위원회를 통한 구제 신청과는 별개로 사용자를 피고로 하여 민사 소송인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ㄴ. (X) 부당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는 노동 위원회에 의한 행정적 구제와 행정 소송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근로자는 부당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 노동 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고, 지방 노동 위원회의 기각 결정(= 부당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에 대해 불복할 경우 기각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 노동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중앙 노동 위원회에서도 기각 결정이 있을 경우 근로자는 재심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중앙 노동 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을은 B 지방 노동 위원회의 기각 결정에 불복할 경우 기각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 노동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해야 하는 것이며, 이를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행정 소송의 경우에도 피고는 중앙 노동 위원회 위원장이 되는 것이며, A회사 사용자가 피고인 것도 아닙니다.
- ㄷ. (O) B 지방 노동 위원회는 부당 노동 행위가 성립한다고 판정한 때에는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발하여야 하며, 부당 노동 행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때에는 그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 ㄹ. (X) 부당 해고에 대해서는 근로자만이 지방 노동 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해서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역시 지방 노동 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 회사의 노동조합은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

하는 갑의 해고에 대해서는 B 지방 노동 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지만,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을의 해고에 대해서는 B 지방 노동 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11. 다음 대화를 통해 추론할 수 있는 개인과 사회를 바라보는 갑과 을의 관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 회사 실적을 올리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직원 개인의 능력입니다. 변화가 필요한 곳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배치한다면, 반드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을 : 아무리 뛰어난 직원이라도 현재 우리 회사의 조직 문화 속에서는 좋은 성과를 내기 어렵습니다. 회사의 실적을 올리기 위해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은 조직 문화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 ① 갑의 입장은 집단의 속성을 개인 속성의 총합과 같다고 본다.
- ② 갑의 입장은 개인주의와 자유주의를 토대로 하면서 사회 유기체설에 기반을 둔 주장과 일치한다.
- ③ 을의 입장은 사회가 개인들 간의 합의에 따라 움직인다고 본다.
- ④ 을의 입장은 사회를 개인의 행복과 자유를 추구하기 위한 단순한 수단으로 본다.

[정답] ①
[출제단원] 사회·문화 - II. 개인과 사회 구조
[출제영역] 사회 실재론 vs 사회 명목론

출제 가능 지수					
난이도 지수					

‘갑’은 회사라는 집단의 실적에 개인의 능력이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이 집단의 특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것은 ‘사회 명목론’입니다. ‘을’은 개별 직원이 뛰어나도 조직 문화의 벽을 넘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이 집단의 특성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보는 것은 ‘사회 실재론’입니다.

- ① (O) 갑의 입장인 사회 명목론에 따르면 집단은 개인의 총합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따라서 집단은 개인 속성의 총합과 같습니다.
- ② (X) 갑의 입장인 사회 명목론이 개인주의와 자유주의를 토대로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사회 유기체설에 기반을 둔 주장은 을의 입장인 사회 실재론입니다. 갑의 입장인 사회 명목론은 사회 계약설에 기반을 둔 주장입니다.
- ③ (X) 사회가 개인들 간의 합의에 따라 움직인다고 보는 것은 개인의 주체성과 능동성을 강조하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사회에 대한 개인의 주체성과 능동성을 강조하는 것은 갑의 입장인 사회 명목론에 해당합니다.
- ④ (X) 사회를 개인의 행복과 자유를 추구하기 위한 단순한 수단으로 보는 것은 사회 계약설입니다. 사회 계약설에 기반을 둔 주장은 갑의 입장인 사회 명목론입니다.

※ 다음 글을 읽고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시오. [문 12. ~ 문 13.]

12.

- ‘골드 러시’라고 불리는 미국 서부 개척 시대였던 1853년, 한 독일 출신 청년이 광부들의 작업복이 쉽게 찢어지는 것을 보고, ㉠ 텐트용으로 생산된 두꺼운 천으로 바지를 만들기 시작하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바지는 광부들로부터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고, 이 청년의 이름을 따서 바지 상표를 만들게 되었는데 이때부터 청바지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 ㉡ 우리나라에는 청바지가 6·25 전쟁 때 참전한 미군으로부터 소개된 후, 생맥주, 통기타 등과 어우러지면서 청년 문화의 상징이 되었다가 지금은 남녀노소 누구나 즐겨 입는 옷이 되었다.
- 19세기 이후 서구 열강의 지배를 받은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에 서양 문물이 전해졌는데, 그중에는 종교도 있었다. ㉢ 많은 선교사들이 아프리카로 건너가 기독교를 전파함으로써 ㉣ 아프리카 고유의 토속신앙이 사라지고 서양 종교인 기독교로 종교가 대체되기도 하였다.

<보 기>

ㄱ. ㉠은 알려지지 않았던 문화 요소를 찾아내는 발견에 해당한다.

ㄴ. ㉡은 외재적 변동에 해당한다.

ㄷ. ㉢은 간접전파에 해당한다.

ㄹ. ㉣은 문화변동의 결과 중 문화동화의 사례에 해당한다.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정답] ②

[출제단원] 사회·문화 - III. 문화와 사회

[출제영역] 문화 변동의 원인과 양상

출제 가능 지수					
난이도 지수					

ㄱ. (X) 텐트용으로 생산된 두꺼운 천으로 바지를 만드는 것은 새로운 문화 요소를 만들어내는 ‘발명’에 해당합니다.

ㄴ. (O) 외재적 변동이란 문화 변동의 원인이 외부에 존재하는 것으로 문화 전파를 의미합니다. 미군이 우리나라에 청바지를 소개한 것은 문화 전파 중 직접 전파의 사례에 해당합니다.

ㄷ. (X) 간접 전파란 방송, 서적, 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해 문화가 전파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선교사가 기독교를 전파한 것은 사람이 직접 문화를 전파하는 것으로서 직접 전파의 사례에 해당합니다.

ㄹ. (O) 문화동화란 기존의 문화 요소가 전파된 문화 요소로 대체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아프리카에 서양의 기독교가 전파됨으로 인해 기존의 토속신앙이 사라진 것은 문화동화의 사례에 해당합니다.

13.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는 (㉠), (㉡), (㉢)(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가운데 (㉠)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제도인 (㉡)은(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편, (㉡)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제도 중 하나인 (㉢)은(는) 업무와 관련하여 질병이나 장애를 얻거나 또는 사망할 경우, 본인의 치료비와 가족에게 생계비를 보장해 주는 제도이다.

<보 기>

ㄱ. ㉠은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지만, ㉡은 소득 재분배 효과가 없다.

ㄴ. ㉠의 수혜자는 ㉢의 수혜자가 될 수 있다.

ㄷ. 기초연금제도는 ㉡에 해당한다.

ㄹ. ㉢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이며, ㉣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이다.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ㄷ, ㄹ ④ ㄴ, ㄷ, ㄹ

[정답] ②

[출제단원] 사회·문화 - IV. 사회 계층과 불평등

[출제영역] 사회 보장 제도의 종류

출제 가능 지수					
난이도 지수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최저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을 제공하는 ㉠은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입니다. 업무와 관련하여 질병이나 장애를 얻거나 사망할 경우 치료비와 생계비를 보장해주는 제도인 ㉢은 산업 재해 보상 보험입니다.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는 공공 부조의 한 종류이므로 ㉠은 공공 부조이고, 산업 재해 보상 보험은 사회 보험의 일종이므로 ㉡은 사회 보험입니다. 나머지 하나인 ㉣은 사회 서비스에 해당합니다.

ㄱ. (X) 공공 부조(㉠)와 사회 보험(㉡)은 둘 다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재원을 100% 정부 재정에서 마련하는 공공 부조(㉠)가 수혜자 부담의 원칙이 적용되는 사회 보험(㉡)보다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클 뿐입니다.

ㄴ. (O) 한 개인이 공공 부조(㉠)와 사회 서비스(㉣)의 수혜를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없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장애인은 공공 부조(㉠)를 통해 생계비를 지원받는 동시에, 사회 서비스(㉣)를 통해 재활에 관한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ㄷ. (X) 기초 연금 제도는 공공 부조(㉠)에 해당합니다. ‘연금’이라는 단어 때문에 사회 보험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출제자는 수험생이 이걸 헛갈려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작성하고 출제하는 경우가 많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공공 부조이나 사회 보험이냐는 사용하는 용어가 아니라 재원을 어디서 마련하느냐에 따라 구분합니다. 재원을 정부 재정에서 마련하면 공공 부조이고, 수혜자 부담의 원칙을 적용하면 사회 보험입니다. 그런데 기초 연금 제도는 정부 재정으로 비용을 충당하기 때문에 공공 부조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마치 아재개그처럼 더 이상 새롭지도 않은데 출제자가 스스로 신박하다고 착각하면서 반복해서 출제하는 내용입니다. 꼭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ㄹ. (O) 앞에서 설명한 바대로입니다.

14. 자료수집 방법 A ~ C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단, A ~ C는 질문지법, 참여관찰법, 문헌연구법 중 하나이다)

비교 항목	비교 결과
자료수집 방법의 구조화표준화 정도	A < C
조사대상자들의 상호작용 파악 용이성 정도	B, C < A
오랜 시간이 경과되어 접근이 어려운 사회·문화 현상 탐구 용이성 정도	A, C < B

※ 낮음 또는 작음 < 높음 또는 큼

- ① A는 조사대상자와 연구자의 의사소통을 전제로 한다.
- ② B는 수집된 자료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
- ③ C는 양적 자료보다 질적 자료의 수집에 적합하다.
- ④ A와 달리 C는 문맹자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기법이다.

[정답] ②

[출제단원] 사회·문화 - I.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

[출제영역] 자료 수집 방법

출제 가능 지수					
난이도 지수					

조사대상자들의 상호작용 파악이 용이한 A는 참여관찰법입니다. 참여관찰법은 연구자가 조사대상자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조사대상자들 간의 상호작용을 파악하는 것이 가능한 자료 수집 방법입니다. 오랜 기간이 경과되어 접근이 어려운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가 용이한 B는 문헌연구법입니다. 질문지법이나 참여관찰법은 사람을 상대로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현재 생존해있지 않은 사람들을 상대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사망해도 문헌은 남습니다. 따라서 문헌연구법은 수 백, 수 천 년 전의 사회·문화 현상을 탐구하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A가 참여관찰법이고, B가 문헌연구법이므로 나머지 C는 질문지법입니다.

- ① (X) 참여관찰법(A)은 연구자가 조사대상자를 관찰하고 기록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주자와 조사대상자간의 의사소통을 필수로 하지 않습니다. 조사대상자와 연구자의 의사소통을 전제로 하는 자료수집 방법은 면접법입니다.
- ② (O) 문헌연구법(B)은 수집된 자료를 연구자가 설정한 가설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편향되게 해석하는 등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있습니다.
- ③ (X) 질문지법(C)은 다수의 응답자에게 동일한 질문을 합니다. 따라서 문항별, 선지별 응답률의 수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치화 된 정보를 양적 자료라고 합니다. 따라서 질문지법(C)은 질적 자료보다 양적 자료 수집에 적합한 자료 수집 방법입니다.
- ④ (X) 질문지법(C)은 조사대상자가 질문지를 읽고 응답하는 방식의 자료 수집 방법입니다. 따라서 문맹자를 상대로 자료를 수집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참여관찰법(A)은 문자를 통해 정보를 주고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맹자를 상대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15. 다음은 갑국의 계층별 인구 구성 변화를 요약한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단, 갑국의 총인구는 2000년 이후 1,000만 명으로 변화가 없다)

○ 2005년 : 상층 인구보다 중층 인구는 4배 많고, 하층 인구는 상층 인구보다 5배 많다.
○ 2010년 : 2005년에 비해 상층 인구는 2배 증가했고, 하층 인구는 1/2로 감소하였다.
○ 2015년 : 2005년에 비해 중층 인구는 1/2로 감소했고, 하층 인구는 동일하다.

- ① 2005년의 계층 구조는 2015년과 달리 모래시계형이다.
- ② 2005년의 하층 인구는 같은 해 상층과 중층의 인구를 합한 것보다 많다.
- ③ 2010년의 상층 인구와 2015년의 상층 인구는 같다.
- ④ 2010년의 사회 구조가 2005년과 2015년에 비해 더 안정적이다.

[정답] ④

[출제단원] 사회·문화 - IV. 사회 계층과 불평등

[출제영역] 사회 계층 구조(제시문 분석형)

출제 가능 지수					
난이도 지수					

- 2005년에 상층 : 중층 : 하층의 비율은 1 : 4 : 5입니다. 이 비율을 인구 1,000만 명에 대입하면 상층 인구는 100만 명, 중층 인구는 400만 명, 하층 인구는 500만 명이 됩니다.
- 2010년에 상층 인구가 2005년 대비 2배로 증가했기 때문에 상층 인구는 200만 명이고, 하층 인구가 1/2로 감소했기 때문에 하층 인구는 250만 명입니다. 1,000만 명에서 상층 인구 200만 명과 하층 인구 250만 명을 빼면 550만 명이 남기 때문에 중층 인구는 550만 명입니다.
- 2015년에 중층 인구가 2005년에 비해 1/2로 감소했기 때문에 2015년의 중층 인구는 200만 명입니다. 하층 인구는 동일하기 때문에 500만 명입니다. 중층 인구 200만 명과 하층 인구 500만 명을 제외한 나머지가 300만 명이기 때문에 상층 인구는 300만 명이 됩니다.

위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2005년	2010년	2015년
상층	100만 명	200만 명	300만 명
중층	400만 명	550만 명	200만 명
하층	500만 명	250만 명	500만 명

- ① (X) 2005년의 계층별 구성 비율은 '상층 < 중층 < 하층'으로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에 해당합니다. 반면, 2015년의 계층별 구성 비율은 '중층 < 상층·하층'으로 모래시계형 계층 구조에 해당합니다.
- ② (X) 2005년의 하층 인구는 500만 명이고, 상층(100만 명)과 중층(400만 명)을 합한 인구도 500만 명으로 서로 같습니다.
- ③ (X) 2010년 상층 인구는 200만 명이고, 2015년 상층 인구는 300만 명으로 서로 다릅니다.
- ④ (O) 2010년은 중층의 비율이 가장 높은 다이아몬드형 계층구조입니다. 2005년은 상층에서 하층으로 갈수록 구성 비율이 높아지는 피라미드형, 2015년은 중층의 비율이 가장 낮은 모래시계형 계층구조입니다. 따라서 2010년의 사회 구조가 2005년과 2015년에 비해 더 안정적입니다.

16.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이 발생할 경우, 일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경제 상황에 대한 추론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채권자는 유리해지고 채무자는 불리해진다.
 ㄴ. 환율의 변화가 없는 경우, 경상수지가 악화된다.
 ㄷ. 고정된 임금을 받는 가게의 실질소득이 감소하게 된다.
 ㄹ. 실물 자산을 보유한 사람이 화폐 자산을 보유한 사람에 비해 불리해진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정답] ③

[출제단원] 경제 - III. 국가와 경제 활동

[출제영역] 인플레이션의 영향

출제 가능 지수					
난이도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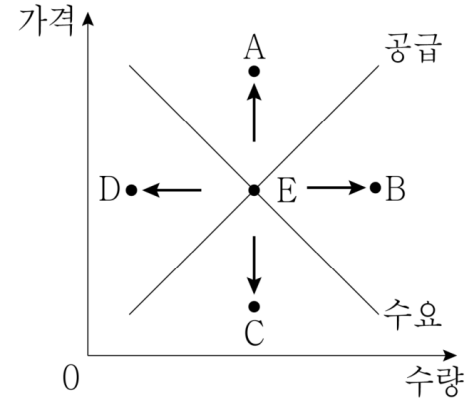
ㄱ. (X)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인플레이션 현상이 발생하면 화폐의 가치가 낮아집니다. 따라서 화폐를 돌려받아야 하는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보유한 자산의 실질 가치가 감소하기 때문에 불리합니다. 반면 채무자는 변제해야 할 채무의 실질 가치가 감소하기 때문에 유리합니다.

ㄴ. (O) 물가가 상승하면 수출 상품의 가격도 함께 상승하기 때문에 수출이 감소합니다. 국내 물가의 상승으로 소비자들이 비싼 국산보다 값싼 수입품을 구매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수입은 증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수출은 감소하고, 수입이 증가하면 경상수지는 악화됩니다.

ㄷ. (O) 임금이 고정되어 있는데 물가가 상승하면 지급받은 임금으로 구매할 수 있는 상품의 양이 줄어들기 마련입니다. 이를 실질소득의 감소라고 합니다.

ㄹ. (X) 물가 상승은 곧 실물 자산 가격 상승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물가가 상승하면 실물 자산을 보유한 사람은 유리해집니다.

17. 그림은 X재 시장의 균형점 E의 이동 방향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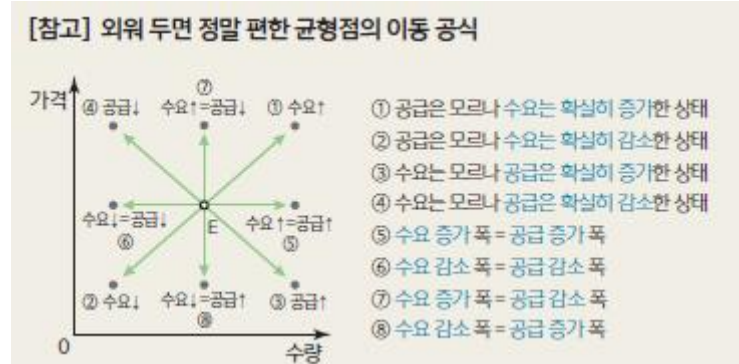
- ① X재의 생산 기술이 발전하고 X재에 대한 수요자의 선호가 감소하면, E는 A로 이동할 수 있다.
 ② X재의 생산 기술이 발전하고 X재 수요자의 소득이 증가하면, E는 B로 이동할 수 있다.
 ③ X재의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고 X재의 대체재 가격이 상승하면, E는 C로 이동할 수 있다.
 ④ X재의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X재의 보완재 가격이 하락하면, E는 D로 이동할 수 있다.

[정답] ②

[출제단원] 경제 - II. 시장과 경제 활동

[출제영역] 균형점의 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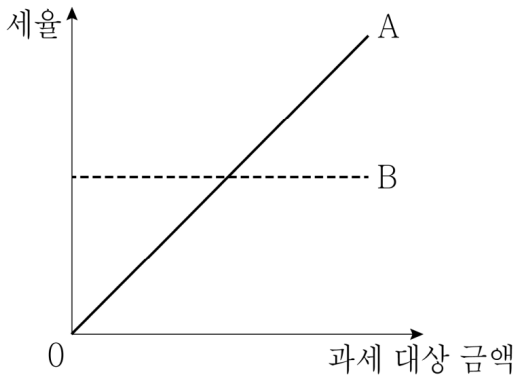
출제 가능 지수					
난이도 지수					



요거 기억하세요? 기본서에서 캡처해 온 내용입니다. 좀 품위 있게 하려면 '외워두면 도움 되는'이라고 표현했을 텐데, '외워두면 정말 편한'이라는 뭔가 감정을 담은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 보니까 '정말 편한'이라는 말이 공감되지 않습니까? 앎은 위 표에서 정리한 것처럼 A는 수요 증가와 공급 감소가 같은 폭으로 이뤄진 것이고, B는 수요 증가와 공급 증가가 같은 폭으로 이뤄진 것이고, C는 수요 감소와 공급 증가가 같은 폭으로 이뤄진 것이고, D는 수요 감소와 공급 감소가 같은 폭으로 이뤄진 것입니다.

- ① (X) 생산 기술이 발전하면 공급이 증가하고, 수요자의 선호가 감소하면 수요가 감소합니다. 그런데 균형점이 E에서 A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은 감소해야 하기 때문에 맞지 않습니다.
 ② (O) 생산 기술이 발전하면 공급이 증가하고, 수요자의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합니다. 이렇게 공급 증가와 수요 증가가 동시에 나타나고 그 폭이 같다면 E에서 B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③ (X)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이 증가합니다. 대체재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는 증가합니다. 그런데 균형점이 E에서 C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수요 감소와 공급 증가가 동시에 나타나야 하기 때문에 맞지 않습니다.
 ④ (X)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이 감소합니다. 보완재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는 증가합니다. 그런데 균형점이 E에서 D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수요 감소와 공급 감소가 동시에 나타나야 하기 때문에 맞지 않습니다.

18. 그림은 조세를 세율의 적용 방식에 따라 두 가지 유형 A와 B로 구분하여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부가 가치세에는 주로 A가 적용된다.
- ② 법인세와 개인소득세에는 주로 B가 적용된다.
- ③ 직접세는 일반적으로 A보다는 B를 적용한다.
- ④ 소득 재분배 효과는 B에서보다 A에서 크게 나타난다.

[정답] ④
 [출제단원] 경제 - Ⅰ. 경제생활과 경제 문제
 [출제영역] 누진세와 비례세

출제 가능 지수					
난이도 지수					

과세 대상 금액의 크기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 A는 누진세 제도입니다. 과세 대상 금액과 상관없이 일정한 세율이 적용되는 B는 비례세 제도입니다.

① (X) 부가 가치세는 소비의 크기와 상관없이 일정한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비례세(B)가 적용됩니다.

② (X) 법인세와 개인소득세는 과세 대상 금액에 비례해서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세(A)가 적용됩니다.

③ (X) 직접세는 주로 소득과 재산에 적용하는 조세부과 방식입니다. 소득세와 재산세는 소득과 재산의 크기에 따라 세율을 달리 적용하는 누진세(A)를 적용합니다.

④ (O) 소득과 재산의 크기에 따라 세율을 달리 적용하는 누진세(A)가 과세 대상 금액과 상관없이 일정한 세율을 적용하는 비례세(B)보다 소득 재분배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납니다. 특히 비례세(B)는 역진성을 가지고 있어서 소득 분배 상황을 악화시킨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19. 표는 총수요나 총공급의 변동이 국민 경제 균형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낸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총수요 곡선은 우하향하며 총공급 곡선은 우상향한다. 또한 A, B는 총수요, 총공급 중 하나이다)

구분	균형 물가 수준	균형 실질 GDP
A만 증가	상승	㉠
B만 감소	상승	㉡
(가)	하락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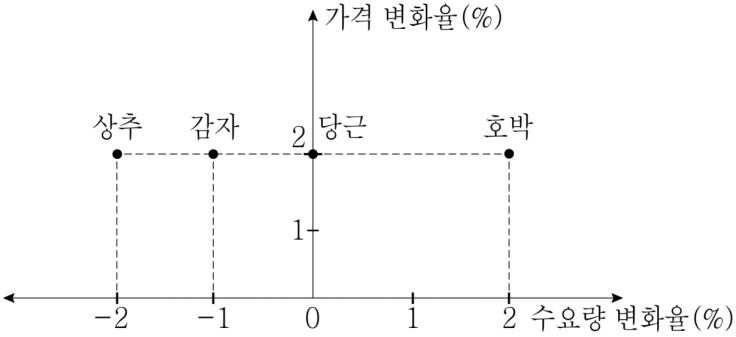
- ① A는 총공급, B는 총수요이다.
- ② ㉠과 ㉡은 모두 '증가'이다.
- ③ (가)에는 'B만 증가'가 들어갈 수 있다.
- ④ 정부 지출의 증가는 (가)의 원인이다.

[정답] ③
 [출제단원] 경제 - Ⅲ. 국가와 경제 활동
 [출제영역] 국민 경제 균형점의 이동

출제 가능 지수					
난이도 지수					

- ① (X) 총공급의 변화 없이 총수요만 증가하면 균형 물가는 상승합니다. 따라서 A는 총수요입니다. 총수요의 변화 없이 총공급이 감소하면 균형 물가는 상승합니다. 따라서 B는 총공급입니다.
- ② (X) 총공급의 변화 없이 총수요만 증가하면 실질GDP는 증가하고, 총수요의 변화 없이 총공급만 감소하면 실질GDP는 감소합니다. 따라서 ㉠은 증가, ㉡은 감소입니다.
- ③ (O) 총수요(A)의 변화 없이 총공급(B)만 증가하면 물가는 하락하고, 실질GDP는 증가합니다. 따라서 (가)에는 B만 증가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 ④ (X) 총수요는 민간 소비, 민간 투자, 정부 지출, 순수출로 구성됩니다. 따라서 정부 지출이 증가하면 총수요가 증가하게 됩니다. 총수요가 증가하면 물가는 상승하고, 실질GDP도 증가합니다. 따라서 정부 지출의 증가는 (가)의 원인이 될 수 없습니다.

20. 그림은 가격이 2% 상승했을 때 각 재화의 수요량 변화율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 ① 감자와 호박의 판매수입은 각각 증가하였다.
- ② 당근의 수요는 가격에 대해 완전 탄력적이다.
- ③ 상추 판매수입은 감소하고, 당근 판매량은 감소하였다.
- ④ 상추의 수요는 가격에 대해 탄력적이다.

[정답] ①

[출제단원] 경제 - II. 시장과 경제 활동

[출제영역] 수요의 가격 탄력성

출제 가능 지수					
난이도 지수					

- ① (O) 감자의 경우 가격 변화율이 수요량 변화율보다 큼니다. 이렇게 가격 변화율이 수요량 변화율 보다 큰 경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비탄력적입니다. 비탄력적 상품의 경우 가격을 올리면 판매수입은 증가합니다. 또한 호박은 가격과 수요량이 둘 다 증가했기 때문에 판매수입은 증가합니다. 참고로 호박의 경우 가격이 올랐음에도 수요량이 증가했기 때문에 수요법칙이 적용되지 않은 사례입니다.
- ② (X) 당근은 가격이 변했음에도 수요량에 변화가 없습니다. 이렇게 가격 변동과 상관없이 수요량이 일정한 경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완전 비탄력적($Ed=0$)입니다.
- ③ (X) 상추는 가격 변화율과 수요량 변화율이 일치합니다. 이렇게 가격 변화율과 수요량 변화율이 일치한 경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단위 탄력적입니다. 단위 탄력적인 상품의 경우 가격의 변동과 상관없이 판매수입은 일정합니다. 당근은 표에서 보듯이 가격과 상관없이 수요량이 일정합니다. 따라서 판매량에 변화가 없습니다.
- ④ (X) ③에서 설명한 것처럼 상추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단위 탄력적($Ed=1$)입니다.